

#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3연속 인증

### 2018년 최초 인증 이후 2023년·2026년 재인증 성공 지질·생태·문화 가치 인정...지속가능 운영 성과 반영 광주시·화순군 등 4개 지자체 협력...국제적 위상 강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이 유네스코 3연속 인증에 성공했다.

광주시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해 공식 누리집에 등재됐다고 27일 밝혔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2018년 최초 인증 이후 2023년 첫 번째 재인증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재인증까지 연속 성공하면서, 지질·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물론 지속할 수 있는 운영 성과를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공식 입증했다.

이번 성과는 첫 번째 재인증 당시 제시됐던 4가지 권고사항(지질유산 보존, 가시성 향상, 파트너십 구축, 교육역량 강화)을 성실히 이행한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질명소인 서유리 공룡화석지의 보존을 위해 고해상도 구축 용역을 추진했고, 금강산을 신규 지질명소로 지정하는 등 지질유산 보존 및 가치 발굴에 힘써왔다. 또 대형 안내판과 도로표지판 설치를 통해 현

장 인지도를 높이고, 자매공원과 협력해 다국어 안내책자를 제작하는 등 가시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했다.

지역사회와 파트너십 구축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무등산수박 생산 자조합 및 명촌마을과 협약을 맺어 지역 특산물과 생태관광 자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

이을러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한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는 등 지질공원 운영의 내실을 다져온 점도 높게 평가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담양군, 화순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세계지질공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력모델은 행정 경계를 뛰어넘는 공동 관리의 세계적 모범

사례로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광주시는 전남도와 통합을 계기로 지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질유산 보전, 교육·관광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 4년 뒤 재인증 평가를 철저히 준비해 세 번째 재인증도 획득,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배 시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두 번째 재인증 성공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이 보전과 교육, 관광과 지역 상생을 아우르는 모델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지질유산 보호와 지역 발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무등산 일석대



강기정 광주시장이 27일 서구 금호동 우리아동병원에서 열린 '제4호 달빛어린이병원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청

## 광주 우리아동병원, 소아 야간·휴일 진료 개시

### 시, 달빛어린이병원 4호 지정...서구까지 확대 평일 밤 11시, 주말·공휴일 오후 6시까지 운영 금호제일약국, 협력 약국 지정해 처방약 조제

광주시는 어린이들이 야간·휴일에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서구 '우리아동병원'을 제4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 27일 개소식과 함께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강기정 시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공식 우리아동병원 대표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지정으로 남구(광주기독병원), 광산구(광주센트럴병원), 북구(아이맘아동병원·북구미래아동병원)에 이어 서구까지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보, 자치구별 균형 있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히 밤늦게 응급실을 찾아 헤매야 했던 부모님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소아 질환자에게 전문진료를 제공하는 소아전담 의료기관이다. 지난해 광주 달빛어린이병원에서 10만 2875명의 소아환자가 전문 진료를 받는 등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

제4호 달빛어린이병원인 '우리아동병원'은 이날부터 2년간 운영된다. 진료시간은 평일 오후 11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병원 인근 '금호제일약국'을 협력약국으로 함께 지정해 진료 후 즉시 처방

약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시민 편의를 제공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공공소아어린이병원이다"며 "엄마아빠들이 '소아과 오픈'으로 시달릴 때 광주는 과감히 자정까지 소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광주기독병원을 제1호로 열었고, 어느새 제4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이어졌다. 우리아동병원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전남연구원, 김·양식·풍력 산업 고도화 방향 제시

전남이 김 산업과 스마트양식, 해상풍력을 축으로 초광역 연안경제를 구축해 '해양수산 수도'로 도약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해양수산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맞물려 전남의 산업 구조를 수출·첨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남연구원은 27일 JN1 이수리포트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연계 전남의 대응 방향'을 발간하고 해양수산 정책 변화에 대응한 전남의 전략을 제시했다.

리포트는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시대 대응'과 '수산식품 수출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점에 주목했다.

전남은 전국 수산물 생산의 59.5%, 양식업의 74.6%를 차지하는 최대 해양수산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16개 해양수산

시·군과 전국 섬의 64%, 해안선의 45%를 보유하고 있어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를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리포트는 전남의 대응 방향으로 △김 산업 글로벌 허브와 △기후적응형 스마트양식 혁신 △해상풍력 이익공유 확산 △어촌소멸 대응 △해양관광 거점 조성 △초광역 연안경제 플랫폼 선도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김태형 연구위원과 박은옥 책임연구위원은 "김 산업 고도화와 스마트양식 전환, 해상풍력 이익공유 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전남이 해양수산 산업 전반을 주도하는 거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고독사 위험군 선제 대응...3만8000명 전수 조사

### 도, 7월까지 체납·자살위험 등 위기 신호 데이터 활용

전남도가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전수에 가까운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체납과 자살위험, 치매 등 위기 신호를 데이터로 추려내고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7월까지 '고독사 위험군 발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도내 1인 가구 43만여 명 가운데 체납, 자살위험, 알코올질환, 치매 등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위기정보 27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3만8000여명이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 중심 행정 점검을 넘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이웃연결단, 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역 단위 인적 안전망을 활용할 행정 데이터로 포착하기 어려운 생활 실태까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기 신호가 복수로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생활 여건과 건강 상태, 돌봄 필요 여부 등을 직접 점검한다. 특히 위기정보가 3종 이상 중복된 가구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실태 파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별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중·고위험군은 건강관리, 돌봄 지원, 생활안정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지속 관리 체계로 연결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

## 통합특별시 보건복지 조례·현안 정비 속도

### 시·도, 시설 종사자 처우·감염병 대응·의료급여기금 등 논의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7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보건복지 분야 조례 통합정비와 주요 현안 사전협의 등 체계적 실행 기반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두 시·도 복지국장과 과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적 출범을 위한 보건복지부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난 3월 1차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앞서 논의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통합에 따른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회의에선 두 시·도 조례 통합 추진 현황과 폐지·쟁점 조례 등을 공유하고, 통합 전 사전협의를 위한 업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준 마련,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방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등 통합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주요 과제를 중점 논

의했다.

두 시·도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보건복지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부서 간 협의를 정례화하고, 분야별 핵심 과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박정환 시 복지국장장은 "조례 통합은 통합특별시의 복지체계를 세우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작업"이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누리는 복지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양 시도가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통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선 도 보건복지국장은 "보건복지 분야는 통합 이후 시·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인 만큼, 서비스 단절이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광주시, 8459농가에 60만원씩 '농민수당' 지급

### 내달 29일까지 행정복지센터서 수령...연말까지 사용 가능

광주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2026년 농민공익수당'을 다음달 29일까지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수당은 농가당 연 60만원이며 광주선불카드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최종 8459농가로, 광주시는 지난 2월 2일부터 지난 달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지급 대상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농민공익수당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광주시와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 농장)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전년도에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가족·근속 사육 농업경영체 경영주에게 지급된다.

카드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로, 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미사용 잔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 기한을 단축했다. 2025년 농민공익수당의 사용 기한은 2년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잔액은 회수된다.

광주시는 수당 사용 기간이 짧아진 만큼 농민들은 기한 내 잔액을 반드시 모두 사용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농민공익수당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3대 공익가치 수당' 중 하나로 지난 2023년 광주시가 광역시 최초로 도입했다. 농민공익수당은 올해까지 3만2352농가에 총 194억1000만원을 지원해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농민공익수당은 7월 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라 2027년부터는 '전남광주특별시 농어민공익수당'으로 통합 지급할 예정이다. 이소홍 기자 photo25@

## 여, 순천시장 후보 불법 의혹에 "감찰 조사 중"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6·3 지방선거 순천시장 후보에 대해 당내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순천시장 후보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한 제보를 입수해 이미

감찰 조사 중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한 언론은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한 사업가가 나는 대화를 녹취한 것이라며 음성 파일 내용을 보도했다. 이소영 기자 solee235@